

광주·전남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사태 살펴보니

세금 66만원 아끼려다 936만원 과태료

작년 5~7월 거래 광주 서구 등 전국 42건 적발... 7억3천만원 부과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정부의 강도높은 단속에도 불구하고 허위신고 사례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지역에서는 66만 원의 취득세를 아끼려다 무려 14배의 과태료를 부과받는 등 지난해 1월 실거래가신고제 시행 이후 총 11건의 허위신고사태가 적발돼 행정조치를 받았다.

2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5~7월 중 신고된 부동산거래에 대한 조사 결과 허위신고 사례 42건(84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7억2천676만원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 매수·매도자가 합의해 실거래가보다 낮춰서 신고한 경우

가 36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계약일을 허위로 기재한 사례도 4건 적발되는 등 다양한 위반사례들이 달미를 잡았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9건), 부산(7건), 광주(2건), 충남(2건) 등의 순이었다.

광주의 경우 지난해 5월 서구의 A아파트 85㎡(26평)를 1억5천600만 원에 거래하고 9천만 원으로 신고한 거래당사자가 각각 93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매수자는 취득세·등등록세를 줄이고 산 사람은 취득·등등록세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광주 남구에서도 다가구주택을 1억800만 원에 거래하고 9천500

만 원으로 신고한 당사자들에게 각각 43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1월 실거래가 신고제 시행 이후 광주에서 적발된 허위신고건수와 과태료는 8건, 7천936만원으로 늘었다. 전남에서도 지난해 1월 이후 3건이 적발돼 7천1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같은 실거래가 허위신고는 대부분 세금을 아끼기 위해 이뤄지고 있다. 가격을 낮춰서 신고할 경우 판 사람은 양도세를 줄이고 산 사람은 취득·등등록세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세금 절감액이 수 십배에 달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다. 허위 신고자에게는 최대 취득세의 3배(취득가액의 6%)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양도소득세 대상자는 탈루세금은 물론 탈루세금의 40%까지 가산세로 납부하게 된다. 예를 들면 1천만 원을 낼 양도세를 700만 원으로 줄였다면 절약한 세금 300만 원과 120만 원(300만 원의 40%)을 더해서 420만 원을 물게 된다.

또 실거래가 신고의 경우 작은 실수로도 과태료를 물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현행법상 계약일 기준으로 30일 내에 실거래가 신고를 위 무화하고 있어 기일을 넘기거나 계약 날짜를 허위로 신고해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정호기자 choice@kwangju.co.kr

“경영권 우선” “주주이익 먼저” 설전

8대1 감사 로켓전기 주총, 이사 선임 요건 강화 놓고 마찰

‘경영권 방어’가 우선이나, 주주 이익이 먼저냐’

21일 광주 본총공판내 로켓전기 주주총회장.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인 로켓전기의 제5기 정기주총에서 회사측과 주주간의 설전이 벌어졌다.

주총안건은 여는 회사와 다른 것은 지난해 실적과 관련된 대차대조표와 결손금처리계산서 승인, 정관 일부 변경안, 이사 선임안 등 5가지.

그러나 자본잠식 상태에 놓인 회사측이 관리종목 지정을 피하기 위해 지난해말 8대1 감자를 단행한 후 주주가 40%이상 급락한 터라 피해를 본 주주들의 반발이 예상됐다.

100여명의 주주들이 참석한 주총은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듯 했으나 정관 일부 변경안이 상정되면서 회사측과 주주간 마찰이 불거졌다.

변경안은 이사선임 요건을 ‘회사에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주총 결의일 현재 계속해서 1년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했고, 이사회 결의

방법도 ‘대표이사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이사회 결의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으로 강화했다.

회사측은 ‘최대주주의 지분(14.48%)이 낮아 경영권 방어가 힘들다’며 ‘경영권을 강화한후 강력한 구조조정을 단행해 100년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이같은 안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 주주는 “그동안 주가 하락으로 막대한 피해를 본 마당에 외부 경영인의 진출을 원천봉쇄하는 것이 아니다. 지난해 96억이라는 큰 손실을 낸 경영진이 경영권 강화에 나선 것은 주주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결국 거수방식의 표결을 통해 72.8%가 찬성해 의안이 통과됐다.

50여분만에 주총이 끝난 뒤 문제를 제기했던 주주는 표결방식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회사측은 이의가 있으면 변호사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라고 답했다.

올해로 창립 61년을 맞는 로켓전기. 100년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겠다는 회사측의 다짐은 주주 우선 정책과는 거리가 있다는 게 일부 주주들의 반응이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로켓전기는?

61년된 국내대표 건전지 생산업체

로켓전기는 1946년 설립된 국내를 대표하는 1차전지(건전지) 생산업체다.

IMF(국제통화기금)로 인한 경영악화로 지난 98년 건전지의 대명사격인 ‘로켓’ 상표의 상표권과 국내 영업권을 P&G(구, 질레트코리아)에 양도한후 위탁생산해 P&G에 납품하고 있다.

또 (주)서통의 건전지 브랜드인 ‘원퍼워’의 생산도 전담하고 있다.

고부가가치의 페이퍼 전지기술에 대한 기술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향후 이 분야가 주력사업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 매출액은 전년대비 10% 감소한 522억원인데 반해 원자재(아연)가격 급등 등으로 순손실만 96억2천만 원을 기록, 적자로 전환됐다.

자본잠식으로 지난해 12월 18일

8대1 감자를 결의해 자본금과 주식수가 각각 42억3천만 원과 84만6천 주로 줄었다. 주식명함으로 줄어든 신주는 오는 26일 상장돼 거래된다.

최대주주는 김종성 회장이며, 지난해 12월 김동영 대표가 사임하면서 현재는 김성찬 전무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주몽’ 모바일 게임을 개발. 22일부터 SK텔레콤·KTF·LGT 등 이통 3사를 통해 서비스를 시작하는 광주지역 게임 개발업체 ‘인터세이브’ 이갑형 대표(사내출출 맨 왼쪽)와 직원들.

내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 업체 개발 ‘주몽’ 모바일 게임 이통 3사 통해 오늘부터 서비스

광주지역 게임 개발업체가 개발한 ‘주몽’ 모바일 게임이 휴대전화로 통해 선보인다.

인터세이브는 ‘주몽’ 모바일 게임을 개발. 22일 SK텔레콤을 시작으로 KTF·LGT 등 이통 3사를 통해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한 때 국민들로 하여금 매주 월요일 밤 10시를 손꼽아 기다리게 만든 드라마 ‘주몽’이 모바일 게임으로 변신, 청소년들로부터 각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게임은 ‘주몽’제작사 올리브 나인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 드라마 주요 인물과 배경·대사·복합 등의 특징을 최대한 살린 것이 장점점으로 꼽히고 있다. 드라마를 본 국민들이라면 알 수 있는 고구려 건국 과정을 스토리해 주몽이 고구려를 건국하기까지 여러 적들과 만나면서 전쟁을 치르는 과정을 담았다.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도록 난이도도 낮췄다.

인터세이브는 이갑형(34) 사장을 비롯해 오재운(29·전남대 컴퓨터학과)·김도국(28·광주대 컴퓨터학과)씨원대 시각디자인과), 박종훈(25·순천제일대 컴퓨터학과)씨 등 광주·전남지역 대학 출신자들이 설립한 회사이며, 이들은 4개월여동안 밤을 새며 주몽 게임을 제작, 완성했다.

특히 광주·전남지역에서는 휴대전화에서 게임이 제대로 작동하는 지 여부를 실험할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되지 않아 수차례 서울 지역을 오가며 시험을 거쳤다.

게임 제작에 들어간 비용은 대략 3천만 원 정도. 일반적으로 이동통신사와 모바일 제공업체 사이에서 이익배분율은 1대 9다.

이들의 바람은 시청률 공공 행진을 거듭하며 인기를 끌었던 주몽 신화가 휴대전화로 이어졌으면 하는 것이다. 정보 이용료 3천 원. 김지을기자 dok2000@

“아파트 잔금받는 날 계약해지는 부당”

서울고법 판결

아파트를 팔기로 계약한 뒤 집값이 오르자 잔금을 받기로 한 날에 계약을 해지하려던 집주인이 법원의 판결로 결국 집값을 내놓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8부(지대운 부장판사)는 경기 안양에 사는 김모씨가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한 집주인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전세로 살고 있던 김씨는 2005년 3월 같은 동네에 18평짜리 아파트가 매물로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서둘러 집주인과 계약을 했다. 2천만 원을 계약금으로 하고 나머지 돈은 3개월 뒤 주기로 했다.

그런데 계약 뒤 아파트 잔금을 치르는 날까지 아파트 집값이 수천만 원 오르자 집주인은 잔금을 받기로 한 날에 갑자기 ‘서류 준비가 덜 됐다’며 잔금을 받지 않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

김씨는 소송을 냈고 집주인은 매매계약서 상의 ‘잔금 지불 전까지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우리 담합했어요” 기업들 자진신고 속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10개 석유화학업체들의 담합사실을 적발해 발표한 이후 담합행위에 가담한 기업들의 자진신고가 속출하고 있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21일 “석유화학업체들의 담합 적발건이 자진신고자 감면제도(Leniency)를 이용한 업체들의 ‘자수’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업계의 분위기가 달라졌으며 자진 신고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석유화학업체들이 11년간 담합해 폴리프로필렌(PP)과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가격을 인상한 사실을 적발, 총 1천5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중 5개사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들 업체 중 호남석유화학이 자진신고로 인해 고발과 과징금 전액을 면제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담합에 가담했던 업계에 ‘자수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광주전남 이용기능장 1호

기술 12년 경력의 최고실력자 이수재원장 직점시술관리

가발

심는가발 평생!!

대신남녀 프림모기발맞춤

상

덤프트럭용 자동달개

대리점 모집 안내

주요특징

- 동력장치 1대
- 1000kg, 1500kg, 2000kg
- 자동달개

적용범위

- 굴러다니는 물품 적재/하차
- 작업장까지 운반하기 용이
- 작업장까지 운반하기 용이
- 작업장까지 운반하기 용이

특이점

- 작업장까지 운반하기 용이
- 작업장까지 운반하기 용이

(주)SY테크수업

문의: 010-9707-2641 / 010-9707-2642

http://www.sytech.com